

민주, ‘대통령 당선시 재판정지’ 형소법 법사위 처리

임기 종료시까지 공판 정지 신설
김건희·내란·채해병 특검도 의결
‘뺨 청문회’ 민주 주도 14일 실시
국힘 “이재명을 위한 법안” 반발

대통령 당선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으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 1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연달아 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에 반대해 온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 주도로 처리됐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

정안은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때에는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또한 피고인이 대선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에도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후보자로 등록한 때부터 개표 종료 시까지 공판 절차를 정지하는 규정이 포함됐다.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는 공판 절차 정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현행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내란·외환 이외의 죄로 이미 기소돼 재판받던 중 사후에 대통령으로 당선된 경우 형사재판을 계속 진행할 수 있

는지에 대해선 명확한 규정이 없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의 형사재판은 재임 기간 정지된다.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 당시부터 이 개정안이 사실상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를 위한 법안이라며 반대해 왔다.

이 후보가 이번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을 비롯해 이 후보 관련 재판이 모두 멈춰서기 때문이다.

정지권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대선에 근접한 시점에 이 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수도 있다는 얘기가 오가고 있다.

이 경우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거부권을 쓰기 어려워지면서 자연스레 차기 정부부터 법안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이날 법사위에서는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법률안’과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대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법률안’도 민주당과 혁신당 의원들만 참여한 가운데 처리됐다.

‘채해병 특검법’으로 불리는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법률안도 의결됐다.

검찰총장 외에 법무부장관도 직접 검사 징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검사징계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현재는 검사 징계는 검찰총장이 하고 법무부가 의결하도록 돼 있다.

한편 법사위는 이날 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

혹 진상규명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서류제출요구건·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건’을 표결에 부쳐 의결했다.

이에 따라 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는 오는 14일 오전 10시 실시된다.

청문회 증인·참고인으로는 이 후보 선거법 사건 유죄취지 파기환송 건과 관련해 조 대법원장과 오석준·신속희·엄상필·서경환·권영준·노경필·박영재·이숙연 대법관 등을 신청했다.

대법원 전산 자료와 관련해서는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 실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은 “다수의석을 이용한 권력 폭주”라고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민주당 광주시당, 오늘 ‘대선 선대위’ 출범식

“압도적 승리로 정권교체”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은 8일 오전 11시 ‘제21대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광주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을 광주시당사에서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날 출범식에는 양부남 광주선대위 총괄 상임선대위원장(광주시당위원장)을 비롯해 상임선대위원장 12명과 박지원 중앙선대위 공동선거대책위원장, 정정래 중앙선대위 골목골목 선대위 광주전남위원장 등 3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출범식은 개회 선언을 시작으로 선대위 인선 발표, 상임 선대위원장 및 중앙선대위 참석자 발언, 대선 승리 결의문 낭독, 경청을 주제로 한 시민 발언이 이어지며, 손피켓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선대위 달성 목표 제막식 순서로 진행된다.

양부남 상임선대위원장은 “이재명 후보의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각 본부별로 조직을 결집하고 확고한 투표 참여 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라며 “출범식에서는 압도적 승리를 통해 정권교체를 이루겠다는 결연한 각오를 다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성현 기자

이상갑 광주시 부시장 사직… 이재명 캠프 합류

이상갑(사진) 광주광역시 문화경제부시장이 사직하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캠프에 합류한다.

7일 광주광역시에 따르면 지난해 3월7일 강기정 시장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이 부시장이 1년2개월여만에 사표를 제출했다. 광주시는 이 부시장의 사직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고 후임을 선임할 계획이다.

이 부시장은 민주당 중앙당으로부터 이재명 대선후보 선거대책본부 법률팀 제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시장은 선거 때까지는 이 후보의 법률 자문 등의 역할을 하고 선거 이후에는 법률 개정 등의 입법 활동을 수행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

졌다. 이 부시장은 “대법원이 이 후보에 대해 유죄 취지 파기 환송이후 아주 크고 새로운 리스크가 발생했다”며 “문제를 해결하는데 힘을 보탬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아 현재의 부시장 직을 사직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 부시장은 변호사 출신으로 법무부 법무실장·인권국장,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공동대표, 광주지방변호사회 인권 및 법률구조위원장,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장 등을 역임했다.

정성이 기자

선관위, 25일부터 ‘6·3 대선’ 투표용지 인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사용할 투표용지를 오는 25일부터 인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달 3일 본투표에 사용되는 투표용지에는 이번 달 24일까지 이뤄진 후보자 사퇴·사망·등록 무효 등 사항이 표기된다.

이달 29~30일 치러지는 사전투표 투표용지에는 이달 28일까지의 사퇴 등 변동 사항이 기재된다.

거소투표와 선상투표 용지에는 이달 19일까지, 재외투표에는 이달 16일까지 후보자의 사퇴 등 사항이 표기될 예정이다.

각 투표의 기간, 투표용지 인쇄 방법 등이 달라 사퇴 등 변동 사항을 표기할 수 있는 기한 또한 다르게 적용한다는 것이 선

관위 설명이다.

선관위는 “이달 25일부터 후보자가 사퇴 또는 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가 된 경우에는 선거일에 사용하는 투표용지에 이를 표기할 수 없다”며 “유권자의 혼란과 무효표를 방지하기 위해 투표 방법별로 ‘사퇴 등’ 표기 기한을 정해 정당·후보자에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불가피하게 후보자의 사퇴 등을 투표용지에 표기하지 못할 경우에는 유권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투표소에 안내문과 현수막을 게시할 예정”이라며 “재외선거인을 위해 재외공관 등 홈페이지에 안내문을 게시하고, 선상투표 대상 선박과 거소투표 대상자에게도 후보자 사퇴 등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金·韓, 단일화 회동 전 악수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오른쪽)와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가 7일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에서 후보 단일화 관련 회동을 하기 전 악수하고 있다.

공동취재·연합뉴스

민주 “조희대 탄핵안, 일단 진상 확인부터”

李 파기환송심 연기에 전략 수정
공수처 고발 보류·공세 속도 조절

서울고법이 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을 대선 뒤로 연기하면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등 강경론으로 기우는 듯했던 민주당의 대응 전략 역시 궤도 수정이 이뤄지고 있다.

파기환송심 연기로 급한 불은 꺾다는 판단에 따라, 대법관 탄핵 등 중도층을 중심으로 여론 역풍을 초래할 수 있는 카드를 굳이 서두를 필요가 있느냐는 신중론으로 무게추가 옮겨가는 모습이다.

실제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탄핵은 당장 추진하지 않되 언제든 책임 추궁을 철저히 진행하겠다고 ‘압박카드’로 남겨놓겠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 후보 파기환송심 연기 발표 이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법관 탄핵 여부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보겠다”고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탄핵 카드를 보류하거나 접는 것은 아니다”라며 “사실 규명을 위한 여러 조치를 진행하면서 탄핵 여부를 검토하겠다”며 속도조절 가능성을 시사했다.

민주당이 예고했던 조 대법원장에 대한 고발도 보류됐다. 애초 민주당은 이날 오후 허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조 대법원장 등 10인을 직권남용, 부정선거운동,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었으나, 공판 연기 소식이 전해진 뒤 이를 연기하기로 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서울고법 앞에서 상임위별로 진행하던 기자회견도 파기환송심

연기에 따라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민주당이 탄핵카드를 포함한 강경 대응 모드를 철회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실제로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 등에 대한 청문회는 예정대로 14일에 진행하기로 하고,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채택했다.

당내에서도 조 대법관의 사퇴를 계속해서 압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민행배 의원은 “파기환송심 연기는 주권자 시민의 승리”라며 “그러나 사법 쿠데타의 총체적 책임을 조희대는 결코 벗어날 수 없다. 당장 물러나야 한다. 물러나지 않으면 그 끝은 탄핵”이라고 적었다.

한편 조국혁신당은 이날 조 대법원장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영산강·금강하구 생태복원, 새정부 과제 삼아야”

국회서 국정과제 정책간담회
하구복원특별법 제정 등 추진

‘영산강·금강하구 생태복원 초광역 대선 국정과제 채택 추진 정책간담회’가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날 간담회는 이학영 국회부의장실이 주최하고, 국가하구생태복원전국회의(전국회의)가 주관했다. 이날 간담회는 이학영 국회부의장, 이개호, 신정훈, 박수

현, 황명선, 이영우 의원 등 영산강·금강·한강유역 중진 국회의원들을 비롯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상임위원,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직속 기후위기대응위원회 양이원영 위원장 등 대선 캠프 핵심 인사들이 참여했다.

또한 박종필 전라남도 환경산림국장, 김영명 충남도 환경산림국장, 김경자 해남군 환경과장 등 광역·기초단체 공직자들과, 전국회의의 최승준, 유승광 상임의장

과 전승수 전남대 명예교수, 김억수, 최대현 집행위원장 등 4대강 유역 시민사회 관계자 등 40여 명의 민관정 인사들이 함께 초광역 차원의 국정과제 채택을 추진해 민관정 협치의 모델이라는 평가다.

이날 제시된 ‘영산강·금강하구 생태복원 초광역 대선 국정과제안’은 △해수유통을 통한 수질 개선 및 기수역 조성 △기수역 구간 취양수장 전역 국비 이전 △통선문 확충 및 이중 도개교 설치로 교통기능 구조 개선 △유역별 국립하구복합센터 건립 등이다.

김성수 기자